

코리아연구원 논평 4호(2010년 3월 26일)

남북한 모두 금강산 관광사업의 조기 정상화 위해 적극 나서야

남북한 당국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1998년 11월에 시작되어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사업으로 자리 잡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금강산관광은 고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당시 남측 관계자들의 노력과 북측 지도부의 결단에 의해 분단 반세기만에 어렵게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다면 이를 재개할 수 있을지, 또 재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강산 관광사업은 지난 2008년 7월 남측 여성 관광객의 피격사망 사건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현재 남측 당국은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 안전보장 강화 등을 관광사업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사실상 남측 당국은 북핵문제와 연계하여 관광사업 재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측은 이미 사건의 개요를 밝힌 바 있고, 필요하다면 남측 관계자들의 현지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과 면담에서 재발방지 및 신변보장을 언급했다. 북측 체제 특성상 어떤 법이나 규정보다 김 위원장의 약속이 우선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발방지와 신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관광사업 재개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남측 당국의 실제 의도는 현재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6자회담과 북핵상황 등을 고려해서, 북으로의 달러 유입을 막기 위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시점을 늦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측 당국의 태도는 옳바르지 않다. 특히, 북핵문제와 금강산 관광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실용적이지도 않다. 그 동안 금강산 관광이 남북 간의 긴장완화, 남북 주민들 간의 이질감 해소,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 그리고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을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핵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남측 당국이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실무협약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북측도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도 높지만, 지금까지 북측의 대남 접근방식에 대해 남측 일반인들의 거부감도 상당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금강산 지역에 투자한 분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북측이 이러한 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준다면 이후 누가 북측과의 협력사업에 나서겠는가. 또한 북측 당국은 금강산 사업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사업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강산지역의 부동산 실태조사 이후 북측이 기존 계약의 파기나 재산동결, 사업자 교체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금강산관광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당국간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금년은 민족사에 있어 가장 부끄러운 경험중의 하나인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금년 중에 남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 중단이라는 민족사의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0/03/26)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을 후원할 수 있으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의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